

민주노총 신규 조합원 현황 (2017-19년 4월)

2019. 9. 10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
- 작성자 :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연구위원 02-2670-9221
 - 민주노총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	1
1. 서론	3
2. 2017-19년 민주노총 조합원 증감 현황	5
1) 전체 조합원 증감 현황	5
2) 산별노조(연맹)별 조합원 증감 현황	6
3) 민주노총 조합원 순증 인원	8
3. 신규 조직 설문조사 결과	10
1) 조사 개요	10
2) 조사 결과	10
가. 수거율	10
나. 조합원 특성	12
다. 조직화 동기	16
라. 조직화 경로	18
마. 단체교섭	20
바. 파업 여부	22
4. 결론	24

<표 목 차>

<표 1> 2017-19년 민주노총 조합원 현황, 증감 인원, 증감률	5
<표 2> 2017-19년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별 조합원 현황, 증감 인원, 증감률	7
<표 3> 2017-19년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별 신규 조합원 순증 현황 추정	9
<표 4> 설문조사 수거 현황	11
<표 5> 평균 조합원 수	12
<표 6> 응답조직 특성1	14
<표 7> 응답조직 특성2	15
<표 8> 2017년 이후 신규노조 조직화 요인(복수 응답)	16
<표 9> 조직 특성별 조직화 요인	17
<표 10> 조직 특성별 조직화 요인	18
<표 11> 특성별 조직화 경로	19
<표 12> 최초 단체협약 체결 여부	21
<표 13> 신규 조직의 2019년 4월 말 단체교섭 현황	22
<표 14> 파업 여부	23

<그 림 목 차>

[그림 1] 2017-19년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별 조합원 증감 인원	8
[그림 2] 2017년 이후 신규노조 조직화 동기	16

〈 요약 〉

- 2017-19년 4월에 민주노총 조합원 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며,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증감현황, 순증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1차 자료는 2017년 이후 가맹·산하조직이 발간한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조직현황임.
 - 둘째,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이 가맹·산하조직을 통해 2017년 이후 설립(가입)한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배포·수거하여 정책연구원이 신규 조직 특성을 분석한 결과임.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의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조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 조합원 수는 1,014,845명으로 2017년 1월 796,874명보다 217,971명(27.4%) 증가하였음.
 - 공공운수노조가 220,626명으로 민주노총 최대 노조이며, 2017년 1월 이후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조직도 50,404명(29.6%) 늘어난 공공운수노조임. 민주일반연맹(22,512명), 공무원노조(9,648명)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이 최소한 82,564명으로 전체 신규 조합원 수(217,971명) 대비 37.9%에 이룸. 그 이외의 산별 조직에 가입한 공공부문 조합원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보고서는 ‘촛불 투쟁’ 이전에 결성한 노조를 제외한 뒤, 민주노총 순증 인원을 154,926명으로 추정하며, 이는 기존 노조가 조직한 76,500명(49.4%)과 신규 노조(지부, 지회, 분회)가 결성한 78,426명(50.6%)으로 구성됨.

- 민주노총이 가맹·산하조직에 2019년 3월에 조사표를 발송하여 수거한 신규 조직현황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이 밝힌 전체 신규 조직 수 765개 중에서 조사에 응한 조직이 249개로 조직 수 기준 수거율이 32.5%임. 신규 조직에 속한 조합원 수를 78,426명으로 추정할 때, 설문조사에 응한 신규 조직 조합원 수는 46,363명으로 조사되어 조합원 수 기준 수거율이 59.1%임.
 - 이번 조사 결과, 249개 사업장에서 46,363명이 조직화되어 평균 조합원 수는 186명이며, 노조 조직형태는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분회가 41,192명(88.8%), 기업별 노조가 3,337명(7.2%), 지역(일반)노조의 지부/지회/분회가 1,834명(4.0%)임.
 - 평균 조합원 수가 제조건설 조합원은 237명이며, 공공부문이 93명, 사무서비스가 214

- 명, 지역본부가 324명임.
- 조합원 수 규모로 볼 때, 300인 미만을 조직한 사업장의 조합원이 15,856명(34.2%), 300인 이상 조직된 사업장 조합원이 30,504명(65.8%)임.
 - 복수노조 상황에 놓인 조합원이 18,067명(42.3%), 단일노조 소속 조합원이 24,671명(57.7%)임.
 - 조합원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15,862명(37.3%),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14,838명(34.9%),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조직에 있는 조합원이 11,786명(27.7%)임.
 - 원청업체 소속 조합원이 17,243명(38.1%)이며,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이 17,413명(38.5%)으로 비슷함.
 - 조합원 평균 연령이 40세 미만인 조직 소속이 18,490명(60.2%), 40세 이상 조직 소속이 12,203명(39.8%)임. 40대 미만 사업장의 평균 조합원 수가 377명인 데 비해, 40대 이상 사업장은 165명으로 중장년 사업장에서 소규모 조직화가 더 활성화됐다고 할 수 있음.
 - 단일직종으로 구성된 조직에 속한 조합원이 20,542명(53.5%), 다수 직종으로 구성된 조직에 속한 조합원이 17,875명(46.5%)임.
 - 노조를 결성한 이유를 묻은 결과, 2017년 1월 이후 신규 사업장 조직화의 동기는 임금(22.2%), 고용불안(19.0%), 직장내 괴롭힘·폭언·폭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15.9%), 정규직 전환(10.3%), 주52시간 상한제에 따른 불이익 등 노동시간 문제(6.3%) 순으로 나타났음.
 - 신규 조직화의 경로와 관련하여 노조 직접방문과 전화상담(42.1%), 지인소개(18.9%)가 가장 비중이 높은 2대 요인으로 나타났음.
 - 2017년 1월 이후 조직화된 사업장 중에서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2%이며, 제조건설이 72.5%이고 사무전문서비스분야가 55.1%로 낮음.
 - 노조 조직형태별로 구분할 때, 산별·지역(일반)노조 소속 사업장의 최초 단체협약 체결률이 66.2%인 반면, 기업별노조가 37.5%로 낮은 편임.
 - 복수노조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복수노조 사업장(46.2%)보다 단일노조 사업장(67.0%)의 단체협약 체결률이 높음.
 - 2017년 1월 이후 조직화된 사업장 중에서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였다는 사업장(5.6%)보다 파업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94.4%)가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1. 서론¹⁾

1) 분석 배경과 목적

- 이 보고서의 목적은 2017-19년에 민주노총 조합원 증감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노동조합 조직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는데 있음.
-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들불처럼 조직화된 시기는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때부터 1989년까지이며, 대투쟁 직전인 1987년 6월 30일 단위노조 수는 2,725개였으나 1989년 7,861개로 5,136개(253.6%) 늘어났고 같은 기간에 조합원 수는 1,050,201명에서 1,932,415명으로 882,214명(84.0%) 증가하였음²⁾.
 - 노동자 대투쟁 직전인 1987년 6월 30일에 노조 조직률은 15.7%였으나 1989년에 19.8%까지 상승한 뒤 계속해서 하락하여 2010년 9.8%까지 떨어졌다가 2017년 10.7%에 이르고 있음.
 -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로 떨어진 2004년 이후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최근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원 100만명 시대를 선포하였음.
 - 그러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경험했던 베이비붐 세대가 점차 정년퇴직하고, 산업 구조와 기술변화로 인하여 조합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근 조직화 추이와 동기,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조직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짐.

2) 분석 자료와 내용

-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증감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2017년 이후 가맹산하조직이 발간한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조직현황 자료이며,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이 일일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 보고서는 전체 조합원 증감현황, 산별노조(연맹)별 조합원 증감현황, 2017년 이후 순증감 효과를 살펴보았음.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등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분석 결과를 최종 수정하였음.

1) 이 보고서는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의 연구과제 ‘2017-19년 민주노총 신규 조합원 조직현황과 시사점(가칭)’의 일부이며,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신 이창근 정책연구위원, 미조직전략조직실의 박이경·백선영·안진 국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장귀연 연구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에게 감사드린다.

2) 고용노동부(2018), 「2017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p.32.

-
- 순증감 효과는 전체 증가 인원에서 2017년 이전에 설립하여 활동하다가 2017년 이후 민주노총에 가입한 조직의 조합원을 제외하여 얻은 결과임.

○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이 가맹·산하조직을 통해 2017년 이후 설립(가입)한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배포·수거하여 정책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설립(가입)연도, 복수노조, 조합원 수, 조직형태, 원하청 관계, 고용형태, 산업, 직업, 노동조합 가입 동기와 경로, 최초 단체협약 체결 현황과 파업 여부를 조사하였음.

2. 2017-19년 민주노총 조합원 증감 현황

1) 전체 증감 현황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의 조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 조합원 수는 1,014,845명으로 2017년 1월 796,874명보다 217,971명(27.4%) 증가하였음.
-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과 정책연구원이 가맹·산하조직의 조합원 현황자료를 수집하여 보정한 뒤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에 796,874명에서 71,075명(8.9%) 늘어나 2018년 1월에 867,949명이 되었으며 146,896명(16.9%) 증가하여 2019년 4월 말 1,014,845명이 되었음.
- 2017년 1월, 2018년 1월 자료를 보정하는 이유는 건설산업연맹이 의무금 납부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계산하다가 2019년부터 조합원 명부에 등록된 인원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수 집계 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보정 이전의 2017년, 2018년 자료는 건설산업연맹의 조합원 수가 실제보다 누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조합원 수 보정 이전의 원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수는 2017년 1월에 730,191명에서 71,075명(9.7%) 늘어나 2018년 1월에 801,266명이 되었으며, 213,579명(26.7%) 늘어나 2019년 4월에 1,014,845명임.

<표 1> 2017-19년 민주노총 조합원 현황, 증감 인원, 증감률

	조합원 수(명)			증감 인원(명)			증감률(%)		
	2017년	2018년	2019년	2017 -18년	2018 -19년	2017 -19년	2017 -18년	2018 -19년	2017 -19년
민주노총*	796,874	867,949	1,014,845	71,075	146,896	217,971	8.9	16.9	27.4
(보정 이전)	730,191	801,266	1,014,845	71,075	213,579	284,654	9.7	26.7	39.0
산별노조(연맹)*	780,186	860,638	1,006,167	80,452	145,529	225,981	10.3	16.9	22.5
(보정 이전)	713,503	793,955	1,006,167	80,452	212,212	292,664	11.3	26.7	41.0
지역본부	16,688	7,311	8,678	-9,377	1,367	-8,010	-56.2	18.7	-48.0

주 : *는 증감 인원과 증감률은 2017년, 2018년 건설산업연맹에서 누락된 조합원 수(66,683명)를 반영하였으며, 보정 이전 자료도 병기함.

자료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자료집,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현황자료(2017년 1월, 2018년 1월, 2019년 4월).

- 2019년 4월 현재, 산별노조(연맹) 소속 조합원 수가 1,006,167명으로 2017년보다 225,981명(22.5%) 증가하였고, 지역본부 소속이 8,678명으로 2017년보다 8,010명

(-48.0%) 감소하였음.

- 민주노총 조합원은 16개 산별노조(연맹)와 16개 지역본부 소속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지역본부로 가입한 조합원들이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전환하면서 지역본부 조합원 수가 감소함.
- 산별노조(연맹) 소속 조합원은 2017년 1월 780,186명에서 80,452명(10.3%) 늘어나 2018년 1월에 860,638명이 되었으며, 2019년 4월에 전년 대비 145,529명(16.9%) 늘어나 1,006,167명임.
- 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은 2017년 1월 16,688명에서 9,377명(-56.2%) 감소하여 2018년 1월에 7,311명이며, 2019년 4월에 전년 대비 1,367명(18.7%) 늘어나 8,678명임.
- 민주노총은 그동안 산하조직인 지역본부에 직접 가입한 노조들에게 상급단체를 산별노조(연맹)로 변경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산별노조 체제를 강화함.

2) 산별노조(연맹)별 조합원 증감 현황

- 2019년 4월, 공공운수노조가 220,626명으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으며, 2017년 1월 이후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조직도 50,404명(29.6%) 늘어난 공공운수노조임.
- 2017년 1월 이후 조합원 증감현황을 볼 때, 공공운수노조(50,404명) 다음으로 사무금융연맹(39,025명), 건설산업연맹(30,260명), 금속노조(25,732명), 민주일반연맹(22,512명), 보건의료노조(21,538명), 서비스연맹(16,172명), 공무원노조(9,648명), 화학섬유연맹(9,619명), 대학노조(2,677명), 언론노조(1,819명), 정보경제연맹(1,514명), 비정규교수노조(83명), 교수노조(53명) 순이며, 여성연맹(-869명)과 전교조(-4,206명), 지역본부(-8,010명)에서 감소하였음.
- 2017년 1월 이후 조합원 증감률을 볼 때, 민주일반연맹(141.8%)이 가장 상승하였으며, 사무금융연맹(130.5%), 화학섬유연맹(50.6%), 보건의료노조(48.1%), 대학노조(44.5%), 정보경제연맹(33.5%), 공공운수노조(29.6%), 건설산업연맹(27.0%), 서비스연맹(24.6%), 금속노조(16.6%), 교수노조(14.4%), 언론노조(14.4%), 공무원노조(11.2%), 비정규교수노조(4.6%), 전교조(-8.0%), 여성연맹(-22.7%), 지역본부(-48.0%) 순서임.
- 2017년 1월 이후 증가한 조합원 217,971명의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공공운수노조(23.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무금융연맹(17.9%), 건설산업연맹(13.9%), 금속노조(23.1%), 민주일반연맹(10.3%), 보건의료노조(9.9%), 서비스연맹(7.4%), 공

무원노조(4.4%), 화학섬유연맹(4.4%), 대학노조(1.2%), 언론노조(0.8%), 정보경제연맹(0.7%), 비정규교수노조(0.0%), 교수노조(0.0%) 순으로 나타났음³⁾.

<표 2> 2017-19년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별 조합원 현황, 증감 인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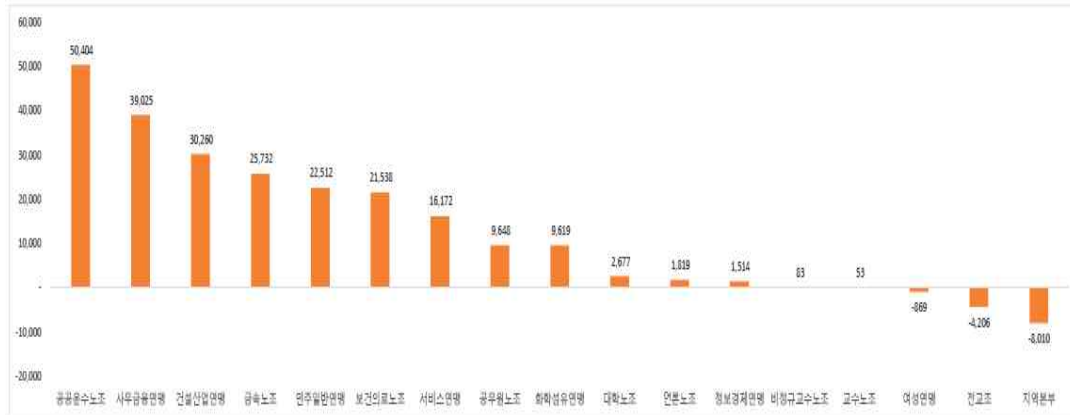
	조합원수(명)			증감인원(명)			증감률(%)		
	2017년	2018년	2019년	2017 -18년	2018 -19년	2017 -19년	2017 -18년	2018 -19년	2017 -19년
민주노총	796,874	867,949	1,014,845	71,075	146,896	217,971	8.9	16.9	27.4
건설산업연맹*	112,023	117,003	142,283	4,980	25,280	30,260	4.4	21.6	27.0
공공운수노조	170,222	190,655	220,626	20,433	31,971	50,404	12.0	16.8	29.6
공무원노조	86,300	86,300	95,948	0	9,648	9,648	-	11.2	11.2
교수노조	367	399	420	32	21	53	8.7	5.3	14.4
금속노조	154,568	174,033	180,300	19,465	6,267	25,732	12.6	3.6	16.6
대학노조	6,009	7,014	8,686	1,005	1,672	2,677	16.7	23.8	44.5
민주일반연맹	15,872	25,721	38,384	9,849	12,663	22,512	62.1	49.2	141.8
보건의료노조	44,750	57,339	66,288	12,589	8,949	21,538	28.1	15.6	48.1
비정규교수노조	1,786	1,792	1,869	6	77	83	0.3	4.3	4.6
사무금융연맹	29,896	30,751	68,921	855	38,170	39,025	2.9	124.1	130.5
서비스연맹	65,775	71,201	81,947	5,426	10,746	16,172	8.2	15.1	24.6
언론노조	12,641	13,100	14,460	459	1,360	1,819	3.6	10.4	14.4
여성연맹	3,822	3,909	2,953	87	-956	-869	2.3	-24.5	-22.7
전교조	52,634	51,365	48,428	-1,269	-2,937	-4,206	-2.4	-5.7	-8.0
정보경제연맹	4,526	5,500	6,040	974	540	1,514	21.5	9.8	33.5
화학섬유연맹	18,995	24,556	28,614	5,561	4,058	9,619	29.3	16.5	50.6
지역본부	16,688	7,311	8,678	-9,377	1,367	-8,010	-56.2	18.7	-48.0

주 : 2019년 4월 건설산업연맹 조합원 수 142,283명은 전년도까지 집계하지 않았던 등록 조합원 수 66,683명이 포함된 것으로 본 보고서는 2017년, 2018년 자료에도 이를 반영하여 조합원 수를 계산함.

자료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현황자료(2017년 1월, 2018년 1월, 2019년 4월).

3) 조합원 수가 감소한 여성연맹, 전교조, 지역본부 비중은 제외하였음.

[그림 1] 2017~19년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별 조합원 증감 인원(단위 : 명)



자료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현황자료(2017년 1월, 2018년 1월, 2019년 4월).

3) 민주노총 조합원 순증 인원

○ 이 연구의 목적이 2017년 1월 이후 신규 조직화에 따른 조합원 수 증감현황 분석인 만큼, 순증 인원을 154,926명으로 추정하고자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촛불 투쟁’ 이후 조합원 순증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연구진은 2017년 1월 이후 민주노총에 가입한 조합원 수 중에서 2017년 1월 이전에 설립되었으나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변경한 조직의 조합원 수는 제외함.
 - 예를 들어, 금속노조의 현대중공업지부, 사무금융연맹의 사무금융노조,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연대는 순증 인원에서 제외함.
- 다만, 과거에 노조 활동이 휴면 상태였다가 2017년 1월 이후 활성화되면서 재조직화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한 경우는 포함하였음.
- 민주노총 지역본부 소속이었다가 산별노조(연맹)로 상급단체를 변경한 인원의 경우 순증 인원에서 제외해야 하나, 이번 조사 범주에 포함하지 못하였음을 밝혀둠.

○ 민주노총 순증 인원 154,926명은 기존 노조가 조직한 76,500명(49.4%)과 신규 노조(지부, 지회, 분회)를 통해 조직화된 78,426명(50.6%)으로 구성됨.

- 2017년 1월 이후 새로 조직된 사업장의 조합원은 공공운수노조가 22,998명으로 가장 많고, 금속노조(13,027명), 보건의료노조(9,296명), 화학섬유연맹(8,723명), 서비스연맹(7,847명)이 조합원 확대 5대 조직임.

- 기존 노조를 통해 조직된 인원은 대체로 산별·지역·일반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의 지역, 직종, 업종 조직에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음.
- 기존 노조의 조합원 증가의 원인은 이 보고서가 관심을 둔 주제는 아니지만, 후속 연구과제에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첫째, 산별노조(연맹)가 그동안 전개했던 전략조직화 사업이 정치적 기회구조 확대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조응하여 일정한 성과를 보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17년 이전까지 단위 사업장이 조직화 현황을 산별노조(연맹)나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 상급단체에 일일이 보고하지 않으면서 신규 노조(지부, 지회, 분회)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음.

<표 3> 2017-19년 민주노총 기맹·산하조직별 신규 조합원 순증 현황 추정(단위 : 명)

	증감 인원	기존노조 (지부, 지회, 분회)	신규노조 (지부, 지회, 분회)	순 증감 인원	기존노조 (지부, 지회, 분회)	신규노조 (지부, 지회, 분회)
민주노총	217,971	86,279	131,692	154,926	76,500	78,426
건설산업연맹	30,260	28,487	1,773	30,260	28,487	1,773
공공운수노조	50,404	27,406	22,998	50,404	27,406	22,998
공무원노조	9,648	6,393	3,255	9,648	6,393	3,255
교수노조	53	53	0	53	53	0
금속노조	25,732	-90	25,822	12,937	-90	13,027
대학노조	2,677	1,383	1,294	2,677	1,383	1,294
민주일반연맹	22,512	9,779	12,733	4,833	0	4,833
보건의료노조	21,538	12,242	9,296	21,538	12,242	9,296
비정규교수노조	83	-7	90	83	-7	90
사무금융연맹	39,025	4,201	34,824	6,454	4,201	2,253
서비스연맹	16,172	8,325	7,847	16,172	8,325	7,847
언론노조	1,819	1,109	710	1,819	1,109	710
여성연맹	-869	-1,145	276	-869	-1,145	276
전교조	-4,206	-4,206	0	-4,206	-4,206	0
정보경제연맹	1,514	1,287	227	1,514	1,287	227
화학섬유연맹	9,619	896	8,723	9,619	896	8,723
지역본부	-8,010	-9,834	1,824	-8,010	-9,834	1,824

주 : 증감 인원은 2017년 1월 이후 민주노총에 가입한 조합원 수이며, 순증감인원은 2017년 1월 이전에 설립하여 가입한 사례를 제외한 결과임.

자료 : 민주노총 기맹·산하조직 조합원 현황자료(2017년 1월, 2018년 1월, 2019년 4월).

3. 신규 조직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민주노총은 ‘촛불 투쟁’ 이후 조직화된 노동조합의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조직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조사 대상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2017년 1월 이후 기존 산별노조(연맹)나 지역본부에 가입하거나 새로 결성한 조직 단위(노조, 지부, 지회, 분회 등)
- 조사 기간 : 2019년 3-5월
- 조사 시점 : 2019년 4월 말 상황
- 조사 내용 : 설립연도, 복수노조, 조합원 수, 조직형태, 원하청 관계, 고용형태, 산업, 직업, 노동조합 가입 동기와 경로, 단체교섭과 파업 등
- 조사 방법 :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이 2019년 3월 8일 구조화된 조사표를 가맹·산하조직에 공문으로 발송하였음. 이후 가맹·산하조직이 각 신규 사업장에 조사표를 배포한 뒤 5월 말까지 회수하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분석하였음.

2) 조사 결과

가. 수거율

- 이번 조사에 12개 산별노조(연맹)와 지역본부(2곳)가 응하였으며, 설문조사 수거율은 조직 수 대비 32.5%, 조합원 수 대비 59.1%에 이르고 있음.
-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이 밝힌 전체 신규 조직 수 765개 중에서 조사에 응한 조직이 249개로 조직 수 기준 수거율이 32.5%임.
- 신규 조직에 속한 조합원 수를 78,426명으로 추정할 때, 설문조사에 응한 조합원 수는 46,363명으로 조사되어 수거율이 59.1%임.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별 설문조사 수거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중에서는 화학섬유 연맹, 비제조업 중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응답률이 가장 높음(<표 4> 참조).
- 조합원 수 기준으로 볼 때, 신규 사업장이 전수조사된 곳은 건설산업연맹, 보건의료노

- 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여성연맹, 정보경제연맹임.
- 전수조사에 미달하나 조합원 수 기준으로 화학섬유연맹(97.3%), 언론노조(98.5%), 대학노조(95.8%), 서비스연맹(94.5%)이 90% 이상 수거되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29.0%, 금속노조는 48.5% 수거율을 보임.
 - 민주노총 조합원 순증 인원 중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최대 규모이지만, 다른 조직보다 설문조사에 반영된 비중이 낮은 편임.

<표 4> 설문조사 수거 현황(단위 : 개, 명, %)

	신규 조직 조합원		조사표 수거 현황		조합원 수 대비 수거율
	조직 수	조합원 수	사업장 수	조합원 수	
민주노총	765	78,426	249	46,363	59.1
건설산업연맹	9	1,773	9	1,773	100.0
공공운수노조	283	22,998	67	6,666	29.0
공무원노조	9	3,255	0	0	0.0
교수노조	0	0	0	0	0.0
금속노조	106	13,027	29	6,319	48.5
대학노조	19	1,294	19	1,240	95.8
민주일반연맹	195	4,833	0	0	0.0
보건의료노조	39	9,296	39	9,296	100.0
비정규교수노조	1	90	1	90	100.0
사무금융연맹	7	2,253	7	2,253	100.0
서비스연맹	31	7,847	24	7,412	94.5
언론노조	6	710	6	699	98.5
여성연맹	8	276	8	276	100.0
전교조	0	0	-	0	0.0
정보경제연맹	3	227	3	227	100.0
화학섬유연맹	43	8,723	32	8,491	97.3
지역본부	6	1,824	5	1,621	88.9

- 신규 사업장 평균 조합원 수(103명)보다 이 조사 결과에의 조합원 수(186명)가 더 많다는 점에서, 조사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조직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규 조직의 평균 조합원 수는 103명이며, 이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186명(=46,363÷249)임.
 - 반면, 이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조직의 경우 평균 62명(=32,063-516)인 만큼 전체 결과를 해석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5> 평균 조합원 수(단위 : 개, 명)

	조직 수	조합원 수	평균 조합원 수
전체 신규 사업장 현황	765	78,426	103
실태조사 참가 조직	249	46,363	186
실태조사 미참가 조직	516	32,063	62

나. 조합원 특성

○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직의 조합원 특성은 <표 6>, <표 7>과 같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이번 조사에서 남성 조합원이 15,358명(58.4%), 여성이 10,941명(41.6%)으로 조사됐음.
- 실태조사 결과, 제조건설 부문이 10,941명(35.8%), 공공부문(공공운수노조와 여성연맹)이 6,942명(15.0%), 사무서비스 21,217(45.8%), 지역본부 1,621명(3.5%)임.
- 가맹산하 조직별 신규 조직별 조합원 수와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건설산업연맹이 1,773명(3.8%), 공공운수노조가 6,666명(14.4%), 금속노조 6,319명(13.6%), 대학노조 1,240명(2.7%), 보건의료노조 9,296명(20.1%), 비정규교수노조 90명(0.2%), 사무금융연맹 2,253명(4.9%), 서비스연맹 7,412명(16.0%), 언론노조 699명(1.5%), 여성연맹 276명(0.6%), 화학섬유연맹 8,491명(18.3%), 정보경제연맹 227명(0.5%), 지역본부 1,621명(3.5%)으로 나타났음.
- 평균 조합원 수가 제조건설 조합원은 237명이며, 공공부문이 93명, 사무서비스가 214명, 지역본부가 324명임.
- 노조 조직형태는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분회가 41,192명(88.8%), 기업별 노조가 3,337명(7.2%), 지역(일반)노조의 지부/지회/분회가 1,834명(4.0%)을 차지함.
- 설립(가입)연도는 2016년 이전이 892명(1.9%)이며⁴⁾, 2017년 16,125명(34.9%), 2018년이 26,016명(56.4%), 2019년이 3,110명(6.7%)임.
- 조합원 수 규모로 볼 때, 300인 미만을 조직한 사업장 조합원이 15,856명(34.2%), 300인 이상 조직된 사업장 조합원이 30,507명(65.8%)임.
- 복수노조 상황에 놓인 조합원이 18,067명(42.3%), 단일노조 소속 조합원이 24,671명(57.7%)임.
- 복수노조 사업장은 평균 조합원 수가 254명, 단일노조 소속은 평균 156명으로 나타

4) 과거에 휴면 상태이거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이 아니었으나 2017년 1월 이후 민주노총에 가입하였음.

- 났음.
- 조합원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으로만 조직된 경우가 15,862명(37.3%),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14,838명(34.9%),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조직에 있는 조합원이 11,786명(27.7%)임.
 - 정규직만으로 조직화된 경우 평균 조합원 수가 196명, 비정규직만으로 조직화에 성공한 경우 175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으로 조직한 경우 287명으로 나타났음.
 - 원청업체 소속 조합원이 17,243명(38.1%)이며,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이 17,413명(38.5%), 원하청 관계와 무관한 독립법인이 9,122명(20.2%), 기타 1,433명(3.2%)임.
 - 사업장이 원청업체라고 응답한 조직의 평균 조합원 수가 167명인 반면에, 하청업체라고 응답한 경우가 198명으로 더 많음.
 - 평균 연령이 40세 미만인 조직의 조합원이 18,490명(60.2%), 40세 이상 조직 소속이 12,203명(39.8%)임.
 - 조합원 평균 연령이 20대인 조직 소속이 804명(2.6%), 30대가 17,686명(57.6%), 40대가 8,566명(27.9%), 50대 이상이 3,637명(11.8%)임.
 - 평균 연령 40대 미만 사업장 평균 조합원 수가 377명인 데 비해, 40대 이상 사업장은 165명으로 중장년 사업장에서 소규모 조직화가 더 활성화됐다고 할 수 있음.
 - 산업별로 1-2차 산업 소속 조합원이 9,960명(21.5%), 3차 산업 소속이 36,403명(78.5%)으로 나타나 제조업보다 공공부문과 서비스산업 조직화라는 특징을 보임.
 - 농림어업, 광업 8명(0.0%), 제조업 9,952명(22.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77명(1.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23명(0.7%), 건설업 1,788명(4.0%), 도소매업 220명(0.5%), 운수업 2,990명(6.8%), 숙박 및 음식점업 128명(0.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638명(15.0%), 금융 및 보험업 1,733명(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758명(6.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212명(5.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43명(2.4%), 교육서비스업 913명(2.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262명(25.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63명(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21명(2.1%)임.
 - 단일직종으로 구성된 조직에 속한 조합원이 20,542명(53.5%), 다수 직종으로 구성된 조직에 속한 조합원이 17,875명(46.5%)임.
 - 생산직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조합원은 8,328명(22.2%), 사무전문서비스직(비생산직) 노조 조합원은 22,288명(59.5%), 생산직과 비생산직을 포괄하는 조직의 조합원은 6,873명(18.3%)임.

- 생산직만으로 조직화된 경우 평균 조합원 수가 149명, 사무전문서비스직의 경우 314명, 생산직과 사무전문서비스직이 공동으로 조직한 경우 215명으로 나타났다.

<표 6> 응답조직 특성1(단위 : 개, 명, %)

		응답 조직		조합원		평균 조합원수
		수(개)	비중(%)	인원(명)	비중(%)	
성별	남자	136	56.9	15,358	58.4	113
	여자	103	43.1	10,941	41.6	106
조직 구분 1	제조건설	70	28.1	16,583	35.8	237
	공공부문	75	30.1	6,942	15.0	93
	사무서비스	99	39.8	21,217	45.8	214
	지역본부	5	2.0	1,621	3.5	324
조직 구분 2	건설산업연맹	9	3.6	1,773	3.8	197
	공공운수노조	67	26.9	6,666	14.4	99
	금속노조	29	11.6	6,319	13.6	218
	대학노조	19	7.6	1,240	2.7	65
	보건의료노조	39	15.7	9,296	20.1	238
	비정규교수노조	1	0.4	90	0.2	90
	사무금융연맹	7	2.8	2,253	4.9	322
	서비스연맹	24	9.6	7,412	16.0	309
	언론노조	6	2.4	699	1.5	117
	여성연맹	8	3.2	276	0.6	35
	화학섬유노조	32	12.9	8,491	18.3	265
	정보경제연맹	3	1.2	227	0.5	76
	지역본부 직가입	5	2.0	1,621	3.5	324
노동조합 조직형태	기업별노조	20	8.0	3,337	7.2	167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분회	218	87.6	41,192	88.8	189
	지역(일반)노조의 지부/지회/분회	11	4.4	1,834	4.0	167
설립연도 (가입연도)	2016년 이전(2017년 이후 가입)	5	2.0	892	1.9	178
	2017년	75	30.4	16,125	34.9	215
	2018년	133	53.8	26,016	56.4	196
	2019년	34	13.8	3,110	6.7	91
조합원 규모	300인 미만	200	93.3	15,856	34.2	79
	300인 이상	40	16.7	30,507	65.8	763
복수노조	복수노조	71	31.0	18,067	42.3	254
	단일노조	158	69.0	24,671	57.7	156
고용형태	정규직 조직	81	39.1	15,862	37.3	196
	비정규직 조직	85	41.1	14,838	34.9	175
	정규직과 비정규직 통합 조직	41	19.8	11,786	27.7	287

주 : 무응답 제외.

<표 7> 응답조직 특성2(단위 : 개, 명, %)

		응답조직		조합원		평균 조합원수
		조직수	비중	인원	비중	
원하청 관계	원청	103	42.6	17,243	38.1	167
	하청	88	36.4	17,413	38.5	198
	원하청 관계가 없는 독립법인	47	19.4	9,122	20.2	194
	기타	4	1.7	1,433	3.2	358
평균연령1	40세 미만 사업장	49	39.8	18,490	60.2	377
	40세 이상 사업장	74	60.2	12,203	39.8	165
평균연령2	20대 이하 사업장	3	2.4	804	2.6	268
	30대 사업장	46	37.4	17,686	57.6	384
	40대 사업장	44	35.8	8,566	27.9	195
	50대 이상 사업장	30	24.4	3,637	11.8	121
산업1	1-2차 산업	53	21.3	9,960	21.5	188
	3차 산업	196	78.7	36,403	78.5	186
산업2	농림어업, 광업	1	0.4	8	0.0	8
	제조업	52	22.4	9,952	22.5	19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1.3	677	1.5	22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3.0	323	0.7	46
	건설업	10	4.3	1,788	4.0	179
	도소매업	2	0.9	220	0.5	110
	운수업	17	7.3	2,990	6.8	176
	숙박 및 음식점업	4	1.7	128	0.3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5.2	6,638	15.0	553
	금융 및 보험업	5	2.2	1,733	3.9	3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	6.5	2,758	6.2	18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13.8	2,212	5.0	6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3.9	1,043	2.4	116
	교육서비스업	10	4.3	913	2.1	9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18.5	11,262	25.5	26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3.0	663	1.5	9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1.3	921	2.1	307
직종1	단일 직종	89	53.6	20,542	53.5	231
	다수 직종	77	46.4	17,875	46.5	232
직종2	생산직	56	35.2	8,328	22.2	149
	사무직	71	44.7	22,288	59.5	314
	생산직 + 사무직	32	20.1	6,873	18.3	215

주 : 무응답 제외.

다. 조직화 동기

○ 노조 결성 이유를 묻은 결과(복수 응답), 2017년 1월 이후 신규 사업장 조직화의 3대 원인은 임금(22.2%), 고용불안(19.0%), 직장내 괴롭힘·폭언·폭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15.9%)로 나타났다.

- 정규직 전환(10.3%)의 경우 공공부문 노조 결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주52시간 상한제에 따른 불이익 등 노동시간 문제(6.3%), 상여금이나 식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산입범위 조정 문제(3.2%)가 제기되었음.

[그림 2] 2017년 이후 신규노조 조직화 동기(단위 : %)



주 : 무응답 제외.

<표 8> 2017년 이후 신규노조 조직화 요인(복수 응답)(단위 : 개, %)

	응답 조직 수(개)	비중(%)
전체	252	100.0
임금	56	22.2
고용불안	48	19.0
부당대우(직장내 괴롭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40	15.9
노동조건 저하(불이익변경)	36	14.3
정규직전환	26	10.3
기타	22	8.7
노동시간	16	6.3
최저임금	8	3.2

주 : 무응답 제외.

○ 여전히 임금·최저임금 문제(31.8%)가 노조 결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보다 고용불안(33.3%)이 더 높고, 하청노조가 원청노조보다 노동조건·노동시간 저하 문제에 노출되어 노조 결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300인 미만 조직의 경우 임금·최저임금 문제(33.3%), 300인 이상의 경우 고용불안(27.7%)과 노동조건·노동시간 문제(27.7%)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생산직은 임금·최저임금 문제(36.2%), 비생산직인 사무서비스직은 노동조건·노동시간 문제(30.6%)가 상대적으로 조직화에 더 중요한 동기로 보임.

<표 9> 조직 특성별 조직화 요인(단위 : 개, %)

		응답 조직				조합원			
		임금/ ·최저임금	고용 불안	부당 대우	노동시간/ 노동조건	임금/ ·최저임금	고용 불안	부당 대우	노동시간/ 노동조건
전체		61	48	34	49	31.8	25.0	17.7	25.5
조직 구분	제조건설	17	17	9	17	28.3	28.3	15.0	28.3
	공공부문*	3	1	3	1	37.5	12.5	37.5	12.5
	사무서비스	38	29	20	27	33.3	25.4	17.5	23.7
	지역본부	3	1	2	4	30.0	10.0	20.0	40.0
노조	기업별노조	5	8	4	7	20.8	33.3	16.7	29.2
조직형태	산별·지역일반노조	56	40	30	42	33.3	23.8	17.9	25.0
복수	복수노조	21	11	11	14	36.8	19.3	19.3	24.6
노조	단일노조	39	36	23	34	29.5	27.3	17.4	25.8
조합원	300인 미만	44	32	23	33	33.3	24.2	17.4	25.0
규모	300인 이상	12	13	9	13	25.5	27.7	19.1	27.7
고용형태	정규직 조직	25	22	18	22	28.7	25.3	20.7	25.3
	비정규직 조직	17	11	8	11	36.2	23.4	17.0	23.4
	정규직+비정규직	18	15	8	15	32.1	26.8	14.3	26.8
원하청 관계	원청	21	19	14	18	29.2	26.4	19.4	25.0
	하청	17	11	9	16	32.1	20.8	17.0	30.2
	원하청관계없음	21	15	8	14	36.2	25.9	13.8	24.1
평균연령	40세 미만	18	17	14	15	28.1	26.6	21.9	23.4
	40세 이상	27	18	11	16	37.5	25.0	15.3	22.2
산업1	1-2차 산업	17	12	8	13	34.0	24.0	16.0	26.0
	3차 산업	44	36	26	36	31.0	25.4	18.3	25.4
직종1	단일 직종	31	20	19	31	30.7	19.8	18.8	30.7
	다수 직종	27	26	10	16	34.2	32.9	12.7	20.3
직종2	생산직	17	9	8	13	36.2	19.1	17.0	27.7
	사무직	24	24	11	26	28.2	28.2	12.9	30.6
	생산직 + 사무직	14	12	8	5	35.9	30.8	20.5	12.8

주 : 무응답 제외. 공공부문은 정규직 전환이라고 응답한 사업장이 26개로 높은 편임.

라. 조직화 경로

○ 신규 조직화의 경로(복수 응답)와 관련하여 노조 직접방문과 전화상담(42.1%), 지인소개(18.9%)가 가장 비중이 높은 2대 요인으로 나타났다.

- 2대 요인 이외에 전략조직화(8.9%), 민주노총 노동상담전화(8.4%), 상급단체 변경(7.4%),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문의(2.6%), 노조가입홍보물(2.2%), 인터넷 및 SNS 검색(1.6%), 기타(1.6%) 순임.

<표 10> 조직화 경로(단위 : 개, %)

	주된 조직화 경로		조직화 경로(부차적 경로 포함)	
	응답조직 수	비중	응답조직 수	비중
민주노총 노동상담전화	16	8.7	16	8.4
노조직접방문 및 전화상담	79	42.9	80	42.1
인터넷 및 SNS검색	3	1.6	3	1.6
지인소개	35	19.0	36	18.9
노조가입홍보물	4	2.2	5	2.6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문의	5	2.7	5	2.6
기타	11	6.0	11	5.8
전략조직화	17	9.2	17	8.9
조직전환(상급단체 변경)	14	7.6	14	7.4
기타	-	-	3	1.6

주 : 무응답 제외.

○ 2대 조직화 경로 중에서 방문상담 효과(민주노총 노동상담전화 포함하여 노조 직접방문 및 전화상담)와 네트워크 효과(지인소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문의 포함)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방문상담 효과의 경우 공공부문(94.4%)과 지역본부(80.0%)가 상대적으로 높고, 산별·지역(일반)노조(72.1%), 단일노조(73.3%), 조합원 300인 미만(75.2%), 정규직 조직(76.1%)과 비정규직 조직(75.8%), 원청업체 노조(72.4%), 평균연령 40세 이상 사업장(68.1%), 1-2차 산업(89.7%), 단일 직종(72.1%), 생산직(92.0%)에서 높게 나타났다.
- 지인소개 등 네트워크 효과는 사무서비스부문(40.8%), 기업별노조(50.0%), 복수노조(43.8%), 조합원 300인 이상(54.8%), 정규직과 비정규직 통합 조직(50.0%), 40세 미만 사업장(38.5%), 3차 산업(35.8%), 다수 직종(40.4%), 생산직과 사무직 통합 조직(4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 특성별 조직화 경로(단위 : 개, %)

		응답 조직(개)		비중(%)	
		방문/전화상담	지인/정당/단체	방문/전화상담	지인/정당/단체
전체		96	42	69.6	30.4
조직 구분	제조건설	30	9	76.9	23.1
	공공부문	17	1	94.4	5.6
	사무서비스	45	31	59.2	40.8
	지역본부	4	1	80.0	20.0
노조 조직형태	기업별노조	8	8	50.0	50.0
	산별/지역/일반노조	88	34	72.1	27.9
복수 노조	복수노조	18	14	56.3	43.8
	단일노조	77	28	73.3	26.7
조합원 규모	300인 미만	76	25	75.2	24.8
	300인 이상	14	17	45.2	54.8
고용형태	정규직 조직	54	17	76.1	23.9
	비정규직 조직	25	8	75.8	24.2
	정규직+비정규직	17	17	50.0	50.0
원하청 관계	원청	42	16	72.4	27.6
	하청	25	11	69.4	30.6
	원하청관계없음	27	13	67.5	32.5
평균연령	40세 미만 사업장	24	15	61.5	38.5
	40세 이상 사업장	32	15	68.1	31.9
산업1	1-2차 산업	26	3	89.7	10.3
	3차 산업	70	39	64.2	35.8
직종1	단일 직종	49	19	72.1	27.9
	다수 직종	31	21	59.6	40.4
직종2	생산직	23	2	92.0	8.0
	사무직	35	23	60.3	39.7
	생산직 + 사무직	18	12	60.0	40.0

주 : 무응답 제외.

마. 단체교섭

- 2017년 1월 이후 조직화된 사업장 중에서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2%이며, 제조건설이 72.5%인 반면, 사무서비스분야가 55.1%로 낮은 편임.
- 노조 조직형태별로 구분할 때, 산별·지역(일반)노조 소속 사업장의 최초 단체협약 체결률이 66.2%인 반면, 기업별노조가 37.5%로 낮은 편임.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복수노조 사업장(46.2%)보다 단일노조 사업장(67.0%)의 단체협약 체결률이 높음.
 - 노조 설립(가입)연도별로 구분할 때, 2017년 설립(가입)한 사업장의 단체협약 체결률이 74.2%, 2018년 설립(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56.4%로 나타났음.
 - 고용형태별로 구분할 때, 정규직이 조직한 사업장의 경우 최초 단체협약 체결률이 68.2%로 비정규직 조직 (61.8%),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통합 조직(55.9%)보다 높게 나타났음.
 - 소속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원청 사업장의 최초 단체협약 체결률이 66.0%로 하청업체(60.7%)나 원하청 관계와 무관한 독립법인 소속 사업장(61.1%)보다 높은 편임.
 - 조합원 평균 연령별로 구분할 때, 40세 미만 사업장(65.9%)이 40세 이상 사업장(54.7%)보다 최초 단체협약 체결률이 높는데, 40세 미만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대규모라는 점에서 규모 효과인 것으로 보임.
 - 산업별로 1-2차 산업의 최초 단체협약 체결률이 77.5%로 3차 산업(58.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직종별로 구분할 때, 단일직종으로 조직화된 경우 최초 단체협약 체결률이 65.3%로 다수 직종으로 조직화된 경우(61.0%)보다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음.
 - 생산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최초단체협약 체결률이 75.0%로 사무직(63.3%), 생산직과 사무직 통합 조직(48.0%)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12> 최초 단체협약 체결 여부(단위 : 개, %)

		응답 조직 수(개)		비중(%)	
		체결	미체결	체결	미체결
전체		98	57	63.2	36.8
조직 구분	제조건설	37	14	72.5	27.5
	공공부문	15	7	68.2	31.8
	사무서비스	43	35	55.1	44.9
	지역본부	3	1	75.0	25.0
노조	기업별노조	6	10	37.5	62.5
조직형태	산별/지역/일반노조	92	47	66.2	33.8
복수	복수노조	18	21	46.2	53.8
노조	단일노조	73	36	67.0	33.0
조합원	300인 미만	73	44	62.4	37.6
규모	300인 이상	22	10	68.8	31.3
설립연도 (가입연도)	2016년 이전 ⁵⁾	3	1	75.0	24.0
	2017년	46	16	74.2	25.8
	2018년	44	34	56.4	43.6
	2019년	4	6	40.0	60.0
고용형태	정규직 조직	45	21	68.2	31.8
	비정규직 조직	34	21	61.8	38.2
	정규직+비정규직	19	15	55.9	44.1
원하청	원청	35	18	66.0	34.0
관계	하청	37	24	60.7	39.3
	원하청관계없음	22	14	61.1	38.9
평균연령	40세 미만 사업장	29	15	65.9	34.1
	40세 이상 사업장	35	29	54.7	45.3
산업1	1-2차 산업	28	8	77.8	22.2
	3차 산업	70	49	58.8	41.2
직종1	단일 직종	47	25	65.3	34.7
	다수 직종	36	23	61.0	39.0
직종2	생산직	30	10	75.0	25.0
	사무직	38	22	63.3	36.7
	생산직 + 사무직	12	13	48.0	52.0

주 : 무응답 제외.

5) 2017년 이후 상급단체 변경 또는 휴면노조 활성화 등을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업장임.

- 2019년 4월 말 현재, 단체교섭 준비 중인 사업장이 24.0%, 단체교섭 중인 사업장이 34.9%, 조정기간 4.1%, 쟁의행위 중 4.8%, 단체협약 체결 사업장이 18.9%로 나타났다.

<표 13> 신규 조직의 2019년 4월 말 단체교섭 현황(단위 : 개, %)

	단체교섭 준비 중	단체교섭	조정기간	쟁의행위 중	단체협약 체결
사업장 수	35	51	6	7	47
비중	24.0	34.9	4.1	4.8	18.9

주 : 무응답 제외.

바. 파업 여부

- 2017년 1월 이후 조직화된 사업장 중에서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였다는 사업장(5.6%)보다 파업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94.4%)가 더 높게 나타났다.

- 가맹조직별로 구분할 때, 제조건설 분야의 파업 돌입률이 8.6%로 나머지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노조 조직형태별로 볼 때, 산별·지역(일반)노조(4.4%)보다 기업별노조(20.0%)의 파업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 파업권을 제약받는 복수노조(4.2%)보다 단일노조(7.0%)에서 파업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 조합원 규모별로 볼 때, 300인 미만 조직화된 사업장(3.5%)보다 300인 이상 사업장(12.5%)의 파업발생률이 높은 편임.
-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으로 설립한 조직(9.8%)과 정규직 조직(8.6%)이 비정규직만으로 조직화된 사례(3.5%)보다 파업발생률이 높은 편임.
- 조합원 평균연령이 40세 이상인 사업장(4.1%)과 3차 산업(15.1%)의 파업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종별로 볼 때, 단일 직종(3.1%)보다 다수 직종(6.7%)으로 조직화된 사업장에서 파업 발생률이 높고, 생산직과 사무직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음.

<표 14> 파업 여부(단위 : 개, %)

		응답 조직 수(개)		비중(%)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14	235	5.6	94.4
조직 구분	제조건설	6	64	8.6	91.4
	공공부문	0	75	0.0	100.0
	사무서비스	6	93	6.1	93.9
	지역본부	2	3	40.0	60.0
노조 조직형태	기업별노조	4	16	20.0	80.0
	산별/지역/일반노조	10	219	4.4	95.6
복수 노조	복수노조	3	68	4.2	95.8
	단일노조	11	147	7.0	93.0
조합원 규모	300인 미만	7	193	3.5	96.5
	300인 이상	5	35	12.5	87.5
고용형태	정규직 조직	7	74	8.6	91.4
	비정규직 조직	3	82	3.5	96.5
	정규직+비정규직	4	37	9.8	90.2
원하청 관계	원청	6	97	5.8	94.2
	하청	5	83	5.7	94.3
	원하청관계없음	3	44	6.4	93.6
평균연령	40세 미만 사업장	0	4	0.0	100.0
	40세 이상 사업장	2	47	4.1	95.9
산업1	1-2차 산업	9	65	12.2	87.8
	3차 산업	8	45	15.1	84.9
직종1	단일 직종	6	190	3.1	96.9
	다수 직종	6	83	6.7	93.3
직종2	생산직	8	69	10.4	89.6
	사무직	6	50	10.7	89.3
	생산직 + 사무직	4	67	5.6	94.4

주 : 무응답 제외.

4. 결론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의 조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 조합원 수는 1,014,845명으로 2017년 1월 796,874명보다 217,971명(27.4%) 증가하였음.
- 조합원 수 기준으로 볼 때, 2019년 4월 현재, 공공운수노조가 220,626명으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으며, 2017년 1월 이후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조직도 50,404명(29.6%) 늘어난 공공운수노조임. 민주일반연맹(22,512명), 공무원노조(9,648명)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이 최소한 82,564명으로 전체 신규 조합원 수(217,971명) 대비 37.9%에 이름. 그 이외의 산별 조직에 가입한 공공부문 조합원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연구보고서에서 ‘촛불 투쟁’ 이전에 결성한 노조를 제외한 뒤, 민주노총 순증 인원을 154,926명으로 추정하며, 기존 노조가 조직한 76,500명(49.4%)과 신규 노조(지부, 지회, 분회)가 결성한 78,426명(50.6%)으로 구성됨.
- 민주노총이 가맹·산하조직에 2019년 3월에 조사표를 발송하여 수거한 신규 조직현황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이 밝힌 전체 신규 조직 수 765개 중에서 조사에 응한 조직이 249개로 조직 수 기준 수거율이 32.5%임. 신규 조직에 속한 조합원 수를 78,426명으로 추정할 때, 설문조사에 응한 신규 조직 조합원 수는 46,363명으로 조사되어 수거율이 59.1%임.
- 이번 조사 결과, 249개 사업장에서 46,363명이 조직화되어 평균 조합원 수는 186명이며, 노조 조직형태는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분회가 41,192명(88.8%), 기업별 노조가 3,337명(7.2%), 지역(일반)노조의 지부/지회/분회가 1,834명(4.0%)을 차지함.
- 평균 조합원 수가 제조건설업은 237명이며, 공공부문이 93명, 사무서비스가 214명, 지역본부가 324명임.
- 조합원 수 규모로 볼 때, 300인 미만을 조직한 사업장의 조합원이 15,856명(34.2%), 300인 이상 조직된 사업장 조합원이 30,504명(65.8%)임.
- 복수노조 상황에 놓인 조합원이 18,067명(42.3%), 단일노조 소속 조합원이 24,671명(57.7%)임.
- 조합원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15,862명(37.3%),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14,838명(34.9%),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조직에 있는 조

-
- 합원이 11,786명(27.7%)임.
- 원청업체 소속 조합원이 17,243명(38.1%)이며,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이 17,413명(38.5%)으로 비슷함.
 - 조합원 평균 연령이 40세 미만인 조직 소속이 18,490명(60.2%), 40세 이상 조직 소속이 12,203명(39.8%)임. 40대 미만 사업장의 평균 조합원 수가 377명인 데 비해, 40대 이상 사업장은 165명으로 중장년 사업장에서 소규모 조직화가 더 활성화됐다고 할 수 있음.
 - 단일직종으로 구성된 조직에 속한 조합원이 20,542명(53.5%), 다수 직종으로 구성된 조직에 속한 조합원이 17,875명(46.5%)임.
 - 노조를 결성한 이유를 묻은 결과, 2017년 1월 이후 신규 사업장 조직화의 동기는 임금(22.2%), 고용불안(19.0%), 직장내 괴롭힘·폭언·폭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15.9%), 정규직 전환(10.3%), 주52시간 상한제에 따른 불이익 등 노동시간 문제(6.3%) 순으로 나타났음.
 - 신규 조직화의 경로와 관련하여 노조직접방문과 전화상담(42.1%), 지인소개(18.9%)가 가장 비중이 높은 2대 요인으로 나타났음.
 - 2017년 1월 이후 조직화된 사업장 중에서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2%이며, 제조건설이 72.5%이고 사무전문서비스분야가 55.1%로 낮은 편임.
 - 노조 조직형태별로 구분할 때, 산별·지역(일반)노조 소속 사업장의 최초 단체협약 체결률이 66.2%인 반면, 기업별노조가 37.5%로 낮은 편임.
 - 복수노조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복수노조 사업장(46.2%)보다 단일노조 사업장(67.0%)의 단체협약 체결률이 높음.
 - 2017년 1월 이후 조직화된 사업장 중에서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였다는 사업장(5.6%)보다 파업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94.4%)가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